

건설동향브리핑

제480호 (2014. 10. 6)

■ 경제 동향

- 2014년 7월 현재 리츠 86개, 자산 규모 12.4조원

■ 정책 · 경영

- 2015년 SOC 예산안, 전년 대비 3.0% 증액된 24.4조원
- 공공공사 입찰 담합의 실태 및 유발 원인 분석

■ 정보 마당

- 빅 데이터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두 마리 토끼 잡아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14년 7월 현재 리츠 86개, 자산 규모 12.4조원

- 개발 사업 투자 자율화 등의 규제 완화 포함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중 -

■ 2014년 들어 12개 리츠 신규 상장

- 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신탁)는 2004년 10개, 1.4조원 수준에서 2014년 7월 현재 86개, 12.4조원으로, 8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함.
- 2014년 7월 현재, 2013년 말 대비 12개의 리츠가 신규로 설립되었으며, 4개의 리츠가 해산, 10개의 리츠가 청산 중에 있음.
- 2008년 이후로는 매년 20개 내외의 신규 리츠가 설립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10개 내외의 리츠가 해산하고 있음.

<연도별 리츠 운용 현황>

(단위 : 개, 조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7
리츠 수	12	14	18	20	36	50	69	71	80	86
신규	2	4	6	5	19	17	32	18	20	12
해산		2	2	3	3	3	2	13	9	4
취소							11	3	2	2
청산 중	1	1	2	3	3	1	3	9	9	10
자산 규모	1.7	3.3	5.0	4.9	7.0	7.6	8.2	9.5	11.8	12.4

자료 : 국토교통부

- 유형별로 보면, 위탁 관리 리츠가 5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기업 구조조정 리츠(CR-REITs)가 그 다음으로 38.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기 관리 리츠는 3.3% 수준을 보임.

<유형별 리츠 현황(2014년 7월 말 기준)>

(단위 : 개, 조원, %)

구분	리츠 수	자산 규모	자산 비율
기업 구조조정 리츠(CR 리츠)	28	4.7	38.1
위탁 관리 리츠	46	7.3	58.6
자기 관리 리츠	12	0.4	3.3
계	86	12.4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난 9월 23일, 개발 사업 투자 자율화 등 리츠 운용 과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 감정 평가 절차 간소화 : 사업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 의무화는 유지하고, 한국감정원·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업자추천제도를 폐지함.
- 개발 사업 투자 자율화 : 개발 사업 투자를 주식 상장 전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주총 특별 결의로 개발 사업과 운영 사업(매입·임대 등) 간의 비중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개발 전문 리츠¹⁾ 폐지).
- 이익 배당 의무 완화 : 모든 리츠의 배당을 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수익 증권, 현물 등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자기 관리 리츠는 의무 배당 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함.
- 차입 규제 완화 :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 자본의 산정 기준일을 현재의 재무 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일 제한을 폐지함.

■ 리츠 관련 제도 지속적으로 개선, 그러나 여전히 제한적

- 올해 초, 모자(母子)형 리츠의 요건 완화,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조합 등을 활용한 투자 허용 등에 이어 감정 평가 및 이익 배당 의무 완화 등의 리츠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모자(母子)형 리츠에서 모(母) 리츠의 요건을 공동 출자로 확대, 손자(孫子) 회사 이상의 종속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한 해외 부동산의 취득을 허용, 취득 제한 예외 증권에 신탁 수익 증권의 추가 등을 올해 초 완화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운영 과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그러나, 리츠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츠의 확대 및 성장에 는 제한적으로 공모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의 검토가 필요함.
 - 리츠의 자본금 규모, 자산 구성, 자본 잠식 등 주식시장 상장 요건 등의 완화를 통해 리츠 공모의 확대와 더불어 리츠 시장 활성화의 도모가 필요함.

엄근웅(책임연구원 · kyeom@cerik.re.kr)

1) 개발 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리츠임.

2015년 SOC 예산안, 전년 대비 3.0% 증액된 24.4조원

- 경기 활성화 위해 계획보다 2조~3조원 증액, 도로·철도 등 교통 SOC 예산 증가 -

■ 2015년 SOC 예산(안), 금년 대비 3.0% 증가

- 정부가 지난 9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SOC 예산(안)은 당초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내수 경기의 부양을 위해 금년보다 3.0% 증가한 24.4조원으로 책정됨.
 -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을 최대한 확장 편성한다는 방침으로, 내년도 예산은 경제 활성화, 안전 사회의 구현, 서민 생활의 안정에 중점을 둠.
 - 특히, SOC 예산의 경우, 당초 2013~17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서의 금액은 22.0조원으로, 올해보다 7% 정도인 2조~3조원을 감축할 예정이었으나, 오히려 계획보다 약 2.4조원이 증액됨.
 - 그만큼 최근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SOC 투자 확대를 통한 건설 경기의 회복이 중요함을 시사함.
 - 다만, 2014~18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2016년에 22.4조원, 2017년에 20.7조원, 2018년에 19.1조원으로, 2016년부터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에는 20조원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 SOC 예산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추경 미포함)	2013년 (추경 포함)	2014년 (B)	2015년 예산안 (A)	증감률 (A/B, %)
▪ 도로	80,038	74,487	77,614	86,451	91,667	84,695	88,590	4.6
▪ 철도(도시철도 포함)	53,512	54,055	61,141	68,591	69,913	68,032	73,026	7.3
▪ 항만·공항	19,283	17,012	17,056	15,862	16,121	16,060	17,394	8.3
교통 SOC 계	152,833	145,555	155,811	170,904	177,701	168,787	179,010	6.1
▪ 수자원	51,076	50,182	29,020	27,315	23,694	23,830	23,054	-3.3
▪ 물류, 지역 및 도시 등	47,198	48,669	46,095	44,805	45,638	44,279	42,025	-5.1
기타 SOC 계	98,274	98,851	75,115	7,2120	96,332	68,109	65,079	-4.4
총계	251,106	244,406	230,926	243,024	250,261	236,895	244,089	3.0
(4대강, 여수엑스포 제외시)	216,000	209,501	227,784	243,024	-	-	-	-

자료 : 기획재정부

■ 도로·철도 등 교통 SOC 예산 6.1% 증가, 완공 공사 및 시설 안전 투자 강화

- 2015년 SOC 예산안을 살펴보면, 교통 SOC를 제외한 수자원, 물류 등 기타 SOC 예산은 올해보다 4.4% 감소할 전망이지만, 도로·철도 항만 등 교통 SOC가 전년 대비 6.1% 증액됨.
- 특히, 교통 SOC 예산은 2009년의 18.3조원 이후 6년 만에 최대치인 17.9조원이 배정됨. 세부적으로, 완공 공사 위주로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안전 및 유지 보수 설비가 집중적으로 증액되어 SOC 시설 안전에 대한 투자가 강화됨.
 - 도로는 공사 중인 사업의 조기 완공 및 교통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어 올해보다 4.6% 증액된 8.9조원이 편성됨.
 - 2014년에 총 54건의 완공 공사가 계획되었는데, 2015년에는 이보다 대략 2배가 증가한 94건(고속도로 5건, 국도 61건, 산업단지 진입도로 28건)이 계획되었으며, 노후 교량 등 위험 구간의 정비 및 첨단 교통 체계 관련 예산도 증가할 전망이다.
 - 철도의 경우, 7.3% 증액된 7.3조원으로, 노후 선로 교체 및 고가, 터널 지하 구간의 내진 보강을 지원하여 철도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도 안전 투자가 5,736억원에서 8,618억원으로 증액됨.
 - 도시부 교통 혼잡 및 평창올림픽 수송 대책 등 국책 사업 지원으로 광역철도가 올해보다 60.4%가 증액된 8,618억원, 원주 강릉 복선전철도 15.0%가 증액된 9,200억원이 계획됨.
 - 항만 및 공항 예산은 8.3%가 증액된 1.7조원이 계획되었는데, 울산 신항 및 부산, 인천, 목포 등 항만 배후 단지의 개발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됨.

■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 도로는 증가하나 철도는 감소

- 한편,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규 도로 사업이 올해보다 6건이 증가한 24건(846억원)으로, 향후 도로 관련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신규 철도 사업은 올해보다 2건이 감소한 4건(1,052억원)으로, 향후 철도 관련 수주에는 다소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공공공사 입찰 담합의 실태 및 유발 원인 분석¹⁾

- 공공공사 입찰 담합 근절, 산업의 환경·구조와 제도적 유발 요인에서 해법 찾아야 -

■ 공공공사 입찰 담합의 특성

-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행위는 지난 30여 년 간 지속되어 왔고, 2014년 들어서는 월 1~2회의 빈도로 관련 사례가 발생하여 건설산업 내 입찰 담합의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공공공사 입찰 담합은 국민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에도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 입찰 담합은 입찰 참가자들의 창의와 효율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입찰 참가 기회를 방해해 시장 경제의 원리를 무력화시키며,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저해함으로써 과도한 공사비의 지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임.
 - 건설산업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 경영 혁신 등의 노력을 유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
- 공공공사와 관련한 입찰 담합은 주로 낙찰자 및 입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공구가 분할되어 발주되거나, 향후 발주될 공사가 다수일 경우, 입찰 참가자를 미리 정하는 방식도 사용되었음.

■ 공공공사 입찰 담합의 실태

- 공공공사 입찰 담합은 특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공중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로 대형 토목 공사 및 환경 시설 등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들에서 주로 발생되어 왔음.
 - 또한, 발주 방식에 있어서는 입찰 참가자가 많은 적격심사낙찰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입찰 참가자의 수가 적은 최저가낙찰제나 턴키입찰제에서 많이 나타남.
 - 입찰 담합의 유형에 있어서는 앞에서 제시한 입찰 담합 방식들이 거의 변화가 없이

1) 본고는 지난 9월 24일, 국회 '건설 입찰 담합 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제1주제 '공공공사 입찰 담합의 실태와 발생 원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입찰 담합에 대응하여 정부도 1974년 이후 지속적으로 입·낙찰 제도를 개선해 왔고, 입찰 담합 제재도 강화해 왔음. 또한,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일명 입찰 상황판), 전자입찰제 등 입찰 담합 적발을 위한 시스템도 개발하여 운영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 입찰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입찰 담합에 대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의 실효성이 낮았음을 보여주는 것임.

■ 공공공사 입찰 담합의 유발 요인

- 일반적인 담합을 유발하는 시장적 요인, 즉 제품 및 기업의 동질성, 기업 수가 적고 집중도가 높은 과점적 시장, 수요에 대한 가격의 비탄력성, 높은 진입 장벽과 기업들의 빈번한 접촉 등을 공공공사 입찰 담합에 적용했을 때,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실제로는 건설산업의 환경과 산업의 구조적·제도적 요인이 더 큰 유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건설산업의 환경 및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앙집중조달제도 및 조달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를 위한 획일적인 심의 기준 등 발주기관의 낮은 전문성이 입찰 담합을 유발하고 있음. 입찰 제도의 운영상에서는 발주처가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지역 업체에 우호적인 입찰 제도 등이 입찰 담합의 또 다른 유발 요인임.
-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행의 입찰 제도가 대부분 품질과 기술보다는 국가 예산 절감 목적의 가격 중심 낙찰 방식을 선호함에 따라 입찰 담합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저가 수주로 인하여 최저 수익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기피하는 건설기업들이 입찰 가격 상호 조정의 유인에 빠지게 하고 있음.
 - 적격심사제의 경우, 계약 이행 능력 평가시 변별력이 부족하고,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에 적용되는 예정가격제의 경우,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예정 가격으로 인하여 이익 확보를 위한 사전 협의와 같은 담합 유인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짐.
 - 턴키·대안 방식은 초대형 및 고난이도의 공사에 적용됨에 따라, 대형 건설기업을 중심으로 입찰 참가자가 구성되고, 공사비의 약 2~3%에 이르는 설계 비용으로 인하여 출혈 경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사전 협의의 유인이 발생함.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

빅 데이터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¹⁾

- 데이터 중심의 의사 결정 문화 형성이 빅 데이터 프로젝트 성공의 관건 -

■ 빅 데이터에 대한 건설업계의 생각

- 국내 건설 경기가 악화일로에 있어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빅 데이터의 도입에 관망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음.
 - 보통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기업이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가 투자 감축이고, 그 중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분야는 IT 부서임.
- 그 동안 도입했던 IT 플랫폼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이지 못해 빅 데이터 프로젝트의 시도에 주저하는 경향을 보임.
 - 과거에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 관리),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프로젝트 정보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면서 큰 성과를 기대했지만, 당초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해 IT 솔루션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이 팽배
- 건설산업은 고유의 프로젝트 기반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데이터의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음.
 - 공동 주택과 같은 일부 시설물을 제외한 다른 건설 분야는 프로젝트에 따라 축적되는 데이터의 종류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빅 데이터의 활용이 어려움.

■ 기업이 데이터 분석 중심의 의사 결정 문화로 변화해야

- 빅 데이터는 데이터 중심의 의사 결정 문화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현상으로 이해해야 함.
 - 데이터 중심의 의사 결정 문화로의 변화 없이, 빅 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음.
 - 데이터 중심 마인드로의 전환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을 가능케 하고, 그것은 좋은 서비스로 연결됨. 그러나, 마인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빅 데이터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임.

1) 본고는 2014년 9월 2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최한 '건설산업의 빅 데이터 미래 전략 세미나'에서 토론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 빅 데이터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중심의 경영 마인드가 필요함.
 - 실무자는 보고서 작성시 데이터의 분석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영자의 마인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규모보다 분석을 통한 예측과 통찰 획득이 중요

- 최근에는 데이터 자체에 집중하다보니 분석보다 규모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 빅 데이터는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엑셀의 데이터 분석도 빅 데이터의 분석이 될 수 있음.
 - 빅 데이터는 사실 기반의 분석을 통해 실무자의 경험 기반의 직관이 간과하는 부분을 보충해준다는 점에 유념해야 함.
- 기업 내부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의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²⁾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 분석, 신사업 개발, 사업 추진 전략의 수립과 같은 분야에서 통찰을 유도할 수 있음.
 -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신사업 개발을 위한 쇼핑 지역의 인식 분석, 해외 국가별 리스크(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석도 가능할 것임.

■ 경영자, 실무자, IT 전문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협업해야

- 빅 데이터 프로젝트는 경영자, 실무자, IT 전문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워크숍을 통해 빅 데이터 주제를 도출한 후, 추진해야 함.
 - 완벽히 준비된 상황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작은 시범 사업으로 출발하고, 점차 완성시켜 나가는 방식이 올바른 접근 방법일 수 있음.
- 위탁 교육을 통해 실무자가 데이터 분석 전문 지식을 습득하도록 유도해야 함.
 - 대학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있음.
 - 현업 실무자가 데이터 분석 지식을 습득했을 때 보다 깊은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음.

강상혁(연구위원 · shkang@cerik.re.kr)

2)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끼리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대인 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플랫폼을 의미함.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내용
9. 25	기획재정부	• 부동산정책팀 주최, '주택 정책 방향 관련 업계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참여
9. 26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 서울시회 주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이홍일 연구위원 주제 발표자로 참여 - 주제 : 건설 경기 동향
9. 29	한국은행	• 금융시장부 주최, '금융시장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주제 발표자로 참여 - 주제 :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의 영향 및 향후 주택 경기 전망
9. 30	한국시설안전공단	• 'SOC 고령화 대비 건강한 기반 시설 만들기 포럼'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주제 발표자로 참여 - 주제 : 공공 시설물의 안전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과제
10. 1	서울연구원	• '최근 중앙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토론자로 참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건설공사 원가 산정 발전 방향 자문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참여 - 건설공사 원가 산정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10. 2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보험제도개선포럼 총괄분과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여 -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

■ '2015년 연구 과제' 공모

- 공모 기한 : 2014. 10. 10(금)까지
- 제안 대상 : 건설 유관 단체, 정부 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건설기업 등
- 기 타 : 세부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참조

■ '민간투자사업 회계/세무 실무 과정' 모집

- 일 정 : 2014. 10. 14(화), 총 1일, 8시간
- 장 소 : 건설회관 9층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 대 상 : 건설기업 민간투자사업 실무자, 유관기관 및 단체 등
- 참가비 : 180,000원/인
- 참 고 : 본 연구원은 노동부 지정 교육 기관으로,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의 재직자일 경우, 교육비 중 일부가 환급됨(우선 지원 대상 기준, 30% 내외). 단, 1일 교육일 경우 대형 기업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
- 문 의 : 기업지원팀 교육 담당(Tel.3441-0691, 3441-0848)

두 마리 토끼 잡아라

국내 경기 회복이 지체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세계 경제 부진과 경쟁국의 추격으로 안심할 수 없다. 특히,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로 고용·임금·소득 정체는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아 자칫 저성장, 저물가, 자산시장 붕괴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확대, 금융·세계 지원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한국은행도 기준 금리를 인하한 통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대규모 적자 재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복지 지출이 금년도 106조원에서 약 115조원 규모로 증가해 전체 예산에서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 또한 교육·문화·환경·연구 개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출이 증가하고, 특히 당초에 줄이기로 한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출도 늘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비해 세수는 획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내년도 재정 수지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가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 자칫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재정 건전성만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언제부터인가 성장은 보수, 복지는 진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상호 간 공통 분모가 없는 대립적 개념으로 오인되고 있다. 그러나, 성장과 복지는 대척점에 있지 않고 큰 맥락에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한다. 성장을 위한 SOC 투자 확충을 예로 들어 보자. 만약 개인의 원활한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며, 인프라 부족으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돼 소득과 일자리가 줄어들면 국민들의 실질적 복지 수준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기반시설, 즉 SOC는 보편적 복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도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 및 교통 시설·국토개발 등 대규모 SOC 투자에 집중했다. 반면, 국민들이 먹고, 자고, 쉬고, 일하는 등 실질적인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생활형 SOC에 대한 관심은 크지 못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어촌 간 생활형 SOC에 대한 격차가 크다.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소득 기반의 취약, 문화·의료·교통 등 생활 여건 부실 등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리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 수준도 꾸준히 향상돼야 한다.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일거양득의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서울경제, 2014. 9. 22>

김흥수(원장 · infra@cerik.re.kr)